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임연진

전화 055-640-4314

보도자료

2025. 1. 24.(금)

검찰의 철저한 직접 수사로,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100억 원을 편취한 사기꾼 일당 직접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빌미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적발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고,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24. 12. 23. 및 '25. 1. 10.)**하였습니다.
- 검찰은 본건의 피해자 **1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기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단서로 범죄정황을 포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고,**
 -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범죄 피해금 및 범죄 혐의자들을 특정하고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한 경위를 확인하여,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관련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 본건 피고인들이 **'거액의 상속재산의 실체가 없음에도 유력 집안 출신의 자산가상속인으로 행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인 사실, 위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하고, 면밀한 추적 끝에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금한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하여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I

사건 개요

1. 피고인 및 피의자

- 피고인 : A○○ (남, 72세, 건설업, '24. 12. 23. 구속 기소)
B○○ (남, 64세, 前 D시 사무관, '25. 1. 10. 구속 기소)
- 피의자 : C○○ (남, 65세, 前 E가수협회 명예부회장, '25. 1. 24. 기소중지)

2. 공소사실 요지

- '20. 7. ~ '24. 9. 거액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가장(假裝)하여, 피해자 9명에게 'C가 거액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곧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약 100억 원을 편취 [특정경제범죄범위반(사기), 사기]
- ※ A·B·C는 최초로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하여 소액을 차용하며 금전 거래관계를 형성, ▲C를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하며 국세청 등을 통한 재산취득 절차를 허위 고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이익 약속, ▲일부 편취금으로 수익금을 지급(돌려막기)하여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빌려 준 금원의 회수를 위해 피고인 등에 의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금원 편취

II

주요 수사 경과

- '24. 3. 13. 경찰, 피해자 甲이 고소된 단순 차용사기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
- '24. 8. 2. 경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4. 11.)에 따른 수사결과 통보
 ※ 검찰은 ① 피해자 甲이 돈을 빌린 경위와 빌린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후, ② 피해자 甲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온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직접 수사에 착수
- '24. 8~11. 계좌영장 5회 청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주범 A와 자산가 행세를 한 C 인지(피해자 4명)
- '24. 12. 4. A 직접 구속
- '24. 12. 18. 자금을 조달한 주범 B 인지, 추가 피해사실 확인(피해자 2명)
- '24. 12. 23. A 구속 기소, B 직접 구속

- '25. 1. 8. 피해자 3명에 대한 추가 범행 인지
- '25. 1. 10. **B 구속 기소**
- '25. 1. 24. C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

Ⅲ 수사 결과 및 의의

1. '거액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가장하여 조직적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을 편취
 - 거액의 상속재산, 높은 가치의 블랙머니·구권화폐·지하자금, 압류되거나 외국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등을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재산취득 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 계속·반복되어 왔습니다.
 - 피고인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 등을 상대로 약 수백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들 중 위 재산의 존재를 믿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C를 거액의 자산가·상속인으로 소개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을 통한 재산취득 절차 및 경과를 허위 고지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편취한 돈을 일부 되돌려주어 신뢰를 얻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 '이번이 마지막이다. 곧 원금도 돌려받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령(평균 연령 : 약 69세)의 평범한 은퇴자, 자영업자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노후 자금이나 사업체 운영자금 등을 송금하였고, 마지막에는 사채를 쓰거나 주택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을 가족 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재산만 취득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리하게 추가 비용을 마련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자금을 조달한 주범 엄단 및 추가 피해 방지
 - 검찰은 피고인들이 언급한 '거액의 상속재산이 실체가 없다는 점'과 국세청·금융감독원이 특정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신고, 문서발급 및 금전납부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규명하였습니다.

- 검찰은 수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한 주범 2명을 구속하여,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 대응을 통한 피해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3. 검찰의 철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 규명

- 일부 피해자의 가족이 A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회유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각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3건).
 -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기망과 원금회복 내지 고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해자 甲에 대한 단순 차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甲이 빌린 돈을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정황을 단서로 하여, 계좌추적, 관련 불송치 사건 기록과 피고인 A의 동종 사건기록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다수의 계좌를 추적하여 피고인 A 등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확보하고, 참고인 여러 명의 진술을 종합하여, A·B·C가 재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송금받은 사실과 피해자 중 1명이 편취당한 금액이 약 80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였고, 경찰에서 불송치되었던 A의 범행들도 모두 직접 재수사하여 A와 공범 B를 모두 구속하였습니다.

IV

향후 계획

- 이 사건은 피해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거액의 재산, 블랙머니, 지하자금 등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도주한 공범 C를 반드시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